

# “신군부, 육해공 3軍 동원 광주 초토화 작전 펼쳤다”

## 특조위 발표로 드러난 사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작전은 육·해·공군이 동시에 참여한 3군 합동군사 작전이었다.

공수여단은 헬기를 동원해 광주 시민을 탄압했으며, 공군은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했다. 해군은 해병대 1개 대대 병력을 투입 대기시켰으며, 목표에서는 해군 편대가 출동해 목표항을 봉쇄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근리·이하 특조위)는 7일 기자회견에서 “계엄사령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육군·공군·해군(해병대) 등 3군 합동작전으로 펼쳤다는 사실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5·18 당시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이레직’으로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 다만, 전투기·공격기 폭탄장착 대기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군 관계자의 비협조와 미국 자료 불충분으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이레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은 북한 전투기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훈련이나 실제 상황에서 공대공(空對空) 미사일을 주로 쏜다”며 “공대지(空對地) 폭탄 장착은 북한 지상에 폭탄을 투하한다는 의미인데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공대지를 장착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진압작전 계획이 작성될 때 ‘수백 명에서 10만 명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과 광주에 거주하는 미국인 등 23명의 소개(疏解) 등 여러가지

공대지 미사일 장착 전투기 대기...해군은 목포항만 봉쇄 진압작전 계획 작성때 ‘10만 명까지 피해’ 의견도 나와 자료 부족·군 관계자 비협조로 폭격설 등 최종결론 못내

정황으로 미뤄 대규모 인명살상을 전제로 한 진압작전 계획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5·18 당시 존재했던 광주 폭격설의 진원은 당시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했던 미 공군 관계자들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신원과 근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윤자중 공군참모총장은 계엄군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소요 사태 상황 전파’자료에는 윤 총장이 1980년 5월17일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광주 상황이 월남과 흡사해 우려된다”는 발언을 했다.

공군은 공수부대와 군수품을 광주로 수송했고 광주지역 항공사진을 촬영해 현지 부대에 전달했다. 윤 총장은 작전임무수행 시 강조사항으로 5·18 기간에는 기존과 달리 광주기지에 입·출항하는 항공기는 광주시내 상공을 통과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군과 해병대의 5·18 당시 활동도 드러났다.

해병1사단은 1980년 5월18일 3연대 33대대 병력 448명에게 출동대기 명령을 내린 후 계엄군의 진압작전 변경으로 해병대 추가 투입 실효성이 떨어지자 4일 후인 5월22일 출동 해제했다.

또 특조위는 해군이 시위대의 해상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함정 30여편대를 출동시켜 목포항만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해상 봉쇄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사태에 따른 사후조치사항’ 문건에는 ‘주모자 및 폭도

도주로 추적 정보 입수, 즉각 소탕태세 유지(공중기동타격)’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2군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일지’에는 ‘1980년 5월22일 ‘소수의 폭도가 선박을 이용해 목포항을 경유한다는 정보에 따라 해군 309편대가 긴급출항, 항만에 경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기무사가 작성한 ‘사태수습 시 고려사항’의 ‘광주사태 폭도들의 탈주방지대책 긴급요’ 문건에는 “탈출구를 찾는 폭도들이 해상으로 탈출, 복귀에 잠입동조하거나 서울지역 등지에서 잠입했던 불순분자나 주동분자들이 서울 등 타 도시로 개별 탈출·재집결해 제2의 광주사태를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상황판단 하에 해군과 해경 합동 해상봉쇄작전으로 해상탈주를 방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는 육군을 중심으로 조사했던 반면 이번 특조위는 3군 ‘합동작전’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자료 부족과 군 관계자 비협조로 중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향후 만들어질 특별기구의 조사를 통해 광주 폭격설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설립된 특조위는 62만 쪽의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기관을 방문조사하는 한편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공식 보고서는 3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근리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조위 조사 한계...특별법 제정·진상규명위 구성 서둘러야

### 남은 과제

5·18 단체 등은 7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하려면 특조위는 시민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존한 채 헬기사격부대나 조종사를 특정하지 못하는 절망발이 결론을 내렸다”며 “공소시효 만료와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5·18재단은 “계엄군이 5월21일 비무장

시민에게 헬기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특조위가 인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특조위가 분석한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의 가치와 진실성에 대한 검증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자료의 경우 군부에 의해 왜곡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조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월 진상규명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5월 단체와 지역민의 바람이다.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했으며 어떠한 경위로 이뤄졌는지 과제가.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도 앞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고 공군 관계자

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건강 등 사유로 조사에 불응했다”며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활동기한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중간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해군·해병의 합동작전 참여에 관한 부분도 활동기한으로 인해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설치될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의 강제력이 부여돼야 한다”며 “고발과 수사요청 권한이 없다면 국방부 특조위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서주석 국방차관 ‘5·18 은폐’ 軍비밀조직 활동 드러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511 연구위원회’(511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수만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에 따르면 서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으로서 511위원회 전달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노태우 정권은 1988년 당시 5·18 국회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실무위원회로 KIDA담당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511위원회를 편성, 운영했다.

KIDA는 511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청문회에 대비해 국방부의 기본방향 제시,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국회 요구자

료 제출 등의 업무를 맡았다. 서 차관은 문안검토와 발표문 작성 등을 전담했다.

일각에서는 511위원회에 참여한 서 차관이 현직으로 있는 만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차관은 이와 관련, 한 언론에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경악 금할 수 없는 결과” “광주학살 주범 법정 세워야”

### 정치권·광주시 반응

윤창현 광주지사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결과”라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들이 38년 동안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식적으로 밝혀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3군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고, 계엄사령부가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해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서 세워야 한다”며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5·18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서 세워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3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종 발표명령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혀 역사에

기록해야만 한다.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 역시 “전두환 군부가 헬기와 전투기까지 동원해 광주시민을 몰살하려 했다는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며 “5·18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이틀 3당과 온도 차는 있었지만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5·18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TÉLÉSIS Paris**

텔레시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시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렉터 & 브랜드 운영